

복지부 스케일링 급여화 방안 착수 치협 임원단, 복지부장관 면담서 실무국장이 밝혀 정 협회장 “보조인력 증원·치의학연구원 설립” 건의

보건복지부가 스케일링 급여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정재규 협회장, 안성모·이수구·김성우 부회장, 윤두중 총무, 김동기 재무, 장영준 홍보이사 등 치협 임원단은 지난 8월 3일 김근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면담을 갖고 치과계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스케일링 완전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배석했던 송영중 연금보험국장은 “스케일링 급여화에 필요한 재원이 약 2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전체적인 틀을 마련키 위해 연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케일링 문제는 지난 7월 21일 치협과 복지부 건의를 적극 수용, 규제개혁위원회가 레진급여화 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치과분야에서 급여화가 가능한 다른 항목의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치협은 그동안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스케일링의 완전 급여화를 계속 주장해 왔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현재 스케일링 급여화와 관련, 소요재정을 고려해 특정 연령층에 대한 급여화 방법 등 여러 대안

을 놓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치대입학 정원 감축 ▲치과 보조 인력 증원 ▲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립 ▲지도치과 의사 제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 건의했다.

이에 대해 면담에 배석한 실무 국장들은 “치과위생사 정원이 3년 새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지역적 정원 배출 편차가 심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증원 의견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무 국장들은 또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과 관련 “미국의 경우 치의학 연구원이 많은 예산에 큰 규모로 존재한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치협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그러나 예산이 필요하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대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 “의료인력이 많아지면 배출된 의료인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창출, 의료시장이 왜곡될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감축하는 추세”라고 복지부 입장을 피력, 김 장관의 이해를 도왔다.

면담 후 정 협회장은 “김 신임 장관에게 필요한 정책건의는 다한 것 같다”며 “정직하고 합리적이어서 치과계와 인연이 많은 실세 장관인 만큼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의료행위 집중 단속, 9월부터 8대 경제사범으로 규정 특별대책단장에 송재성 복지차관

보건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정부는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8대 경제사범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범은 8대 경제사범 중 하나이며 경제적 피해는 물론,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제조·유통행위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행위에 대해 9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송재성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했다. 특별 단속반은 식약

청 지방청과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해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와 허위광고 사이트 단속 활동이 중점 강화될 예정이다.

인터넷 생활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의 불법 식·의약품 판매와 허위·과대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신고전화, 인터넷(보건복지부, 식약청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치협등 의료계 단체 자율징계권 재추진 5개 단체장 “의료법 개정”에 공감

치협·의협·병협·한의협·간협 등 보건의료계가 의료법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자행,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 윤리회원들을 각 단체들이 자체 징계할 수 있도록 일부 행정 처분 권한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추진 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규 협회장, 김재정 의협 회장, 유태전 병협 회장, 안재규 한의협 회장, 김의숙 간협 회장은 지난 8월 17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계 정책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협회장은 “극소수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매도당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협회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을 자체 징계,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스스로 자정 노력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각 단체장들 모두 공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자율징계권을 명시한 의료법개정안은 16대 국회 때인 지난해 10월 치협, 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입법청원을 추진했으나 16대 국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폐기 됐다.

한편 치협은 현재 의약계 단체 자율 징계권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또는 과잉진료 인지는 전문성이 없는 업무 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의료법 위반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자율성 확보와 규제개혁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DEET 난이도 어려웠다 서울 등 5곳 검사지구서 첫 시험 실시

2003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처음으로 실시된 치의학입문검사(DEET)가 지난 8월 29일 서울고등학교를 비롯,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5곳 검사지구서 실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이날 시험에는 199명이 결시해 1668명 중 1469명이 응시, 당초보다 다소 낮아진 4.3: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의 난이도와 관련,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기관인 서울메디컬스쿨 측은 “지난 2월에 실시된 예비검사에 비해 어려운 편”이라며 “언어추론 영역은 대학원 수학에 요구되는 난이도의 독해지문과 독해능력을 평가했으며, 자연과학추론 영역 중 생물학, 물리학도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과 관련 ▲시험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풀었다 ▲공간능력영역에서 연필을 사용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불만을 사이버 상에 토로하며 행정상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영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획부장은 “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 조사에서 문제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DEET는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치전원은 검사 결과를 2005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활용하되 반영방법과 비율은 학교 자율로 정한다.